

第250回國會
(定期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4年9月16日(木)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건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1년도국가수준학력평가자료에 관한보고

審査된案件

1.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건 1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1년도국가수준학력평가자료에 관한보고 3

(14시49분 개의)

○위원장 황우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건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 교섭단체에서 진지하게 협의를 거쳐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살펴 주시고 조배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열린우리당 조배숙 위원입니다.

200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23일 까지 2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휴일과 감사준비 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감사 일수는 11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해서 총 46개 기관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감사반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앙감사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감사는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1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10인, 2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 본부에 대해서는 총 2일간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첫날인 10월 4일과 마지막 날인 10월 21일에 직속기관을 함께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6개 산하기관 중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10월 8일, 정신문화연구원 등 4개 기관은 10월 19일에 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시·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10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10월 6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강원도교육청 등 12개 교육청에 대해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충북교육청은 올해 전국체전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제외했습니다.

국립대학교와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은 감사를 현지에서,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국립대학교 8개 대학과 서울대학병원을 제외한 9개 대학병원에 대해 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조배숙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200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安商守 委員 감사일정 중 10월 4일, 10월 5일, 10월 6일 계속 이렇게 일정을 잡아 놓았는데 10월 7일 목요일에 감사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월 화 하고 그다음 수요일에 한 번 쉬고 목 금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데도 다 월 화, 수 쉬고 목 금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그러니까 월 화 수 죽 달아서 하는 것보다는 월 화, 목 금이 옳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조배숙 위원 여야 간에 간사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안상수 위원님이 속하신 교섭단체인 한나라당 간사께서 특별히 요청하셔서 저희가 받아들인 사안입니다.

○安商守 委員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안상수 위원님이 아셨다니까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해서……

○박창달 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10월 15일 제주도교육청하고 제주대학교, 제주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열악합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육위원 20명이 다 가야 될지 그것을 한 번 더 상의해서, 아니면 1반 2반 반반 나누어서 가든지 이런 것이 안 좋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가 보면 20명 죽 가서 한다는 것이 조금 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것도 간사회회에서 제주도가 교육감 선거 비리 문제가 부각되고 해서 한번 저희들이 다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박창달 위원 양당 간사의 의견도 존중하는데요. 간사 합의가 되었으면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고맙습니다.

○박창달 위원 8쪽 주요 감사사항 보면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그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의 고

유 업무라고 하는 것이 국가사업과 지방사업 굉장히 확인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고유 업무인지, 이것이 항상 시·도 나가 보면 쟁점이 됩니다. 이것을 좀더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우여 시·도 교육청의 고유 업무와 국가 업무 또 위임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이 감사에 출발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단계에서 명확히 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약속을 드립니다.

○진수희 위원 저는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시·도 교육청을 엮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는 “현지”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면 14일 감사2반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을 현지라고 묶어 놓으셨는데 지역이 다를 것 아닙니까? 다 한 군데 모여서 합니까?

○이주호 위원 그것은 부산에 모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조금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황우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은 끝에 실음)

현지에서 실시하는 시·도 교육청 감사 시 감사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 이것과 관련한 것이 아니고요.

긴급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13일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질의하기를 희망했지만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주지하시다시피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파급 여파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 여야 양당 위원님들이 다 출석하셨기 때문에 교육과정평가원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이 새로운 안건 상정이 즈음하여 양당 교섭단체 간사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우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께서 협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년도 국가수준학력평가자료에 관한 보고를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년도 국가수준학력평가자료에 관한 보고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년도 국가수준학력평가자료에 관한 보고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더 상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미 언론을 통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일부 유출되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먼저 유감스러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 달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개선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2001년도부터 초6,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1%를 표집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2월 23일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인지한 다음 우리 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상황 보고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통보하였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의 관련 당사자가 사과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구두 보고에 따라 이 문제에 관하여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했음을 사과드리며 향후 우리 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촉구하고 우리 부도 학력평가 시행에 따른 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입니다.

먼저 200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원자료가 유출되어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누를 끼치게 된 점도 아울러 사과 말씀드립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 개요, 연구 원자료 유출 경위,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연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목별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과정의 목표에 비추어서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는가와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의 각종 배경변인과 성취도의 관계 분석을 통해 교수-학습 및 장학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인 자료를 산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 반드시 습득하여야 할 국민 공통 기초 학력에 대한 성취 수준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0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서 16개 시·도 교육청의 위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탁사업으로 수행했습니다. 당시 주관기관은 서울시교육청이었습니다.

총 4억 9995만 원의 예산 중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2억 8875만 원, 그리고 저희 교육과정평가원 기본연구비 예산 2억 1120만 원이었습니다.

연구 내용은 평가 틀을 수정·보완하며,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평가 문항 및 채점기준, 학생 및 교사 배경변인 설문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요강을 개발했습니다.

평가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222개 학교 중에서 한 학급씩 표집해서 8023명, 중학교 3학년의 경우 179개 학교에서 한 학급씩 6799명,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175개 학교에서 한 학급씩 7737명,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175개 학교에서 한 학급씩 7427명을 표집했습니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 평가담당관, 표집 학교 평가 담당교사가 평가 시행 관련 연수를 받고, 또 평가 도구를 인쇄·배부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시행과 채점을 맡아서 했습니다.

검사 자료는 전적으로 평가원 전산센터에서 입력을 하고 채점을 했습니다.

저희 평가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및 보고를 하였습니다.

결과 및 활용입니다. 학생 개인별 평가 결과는 표집학교 학생에게 교과별 학업성취도 결과를 산출하여 제공했습니다.

학업성취도 결과는 교과별 및 교과 영역별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의 4등급으로 정보를 제시하여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이 향후 학습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국가수준의 평가 결과는 전체 6권이 되겠습니다. 연구보고서로 엮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 보완과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해인 2002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는 2003년 12월 23일에 연구를 완성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금년 4월에 소책자로 엮어서, '부모와 대화 많이 하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높아'라는 제목으로 국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소책자는 전부 1만 권을 찍어서 학교와 언론기관에 배포했습니다.

200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는 현재 분석 중이고, 금년 12월 말에 보고서가 완료되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구 원자료 유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본 성취도 평가의 연구 과제 책임자였던 이명희 부연구위원은 2002년 9월 1일자로 국립공주대학교 조교수로 전직했습니다. 이명희 교수가 자료를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한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동 연구진에 제공된 것으로 자료에 '추정'으로 되어 있

습니다.마는, 수정하겠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 자료의 유출 사실은 이 연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금년도 2월 23일 언론에 발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아울러서 지난 9월 9일과 10일에 언론에 보도된 '지역별 학력차' 관련 자료도 동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내용은 학업성취도의 변화 추이 분석을 위하여 2003년부터 연구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매년 변화 추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와 같은 평가기관인 미국 ACT와 공동 연구로 동등화 및 척도점수 산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3개 학년 5개 교과 성취도 척도점수를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예산을 연차별로 증액해서 표집대상을 확대토록 시·도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은 1%에서 3%로 확대하도록 확정해서 지금 시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구 자료 보안 관리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연구직이 저희 연구원을 퇴직할 시는 반드시 연구자료 반납을 확인하고 각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이 전체 연구 자료를 한꺼번에 소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관리 및 보안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저희 원내 보안 업무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근거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첫 번째 발언시간은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대략 세 가지를 초점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평가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의 도중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데 동료 위원님의 얼마 전 발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소 언급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01년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관련 자료 유출과 관련하여 일정한 의미에서 불법성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데 그 사실 자체부터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불법 유출이 맞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자료의 유출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상 재직 중에 취득한 비밀 업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실이고 그 외 저희 원의 보안 업무 규정 그리고 연구 사업 운영 규정, 연구 사업 운영 규정상은 연구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지난 2월 23일 당시 KDI 산하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님들과 이 자료 유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분으로 거명된 이명희 교수님, 이런 분들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그 당시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이라는 논문이 발표됐을 때 그 사실 자체를 확인하셨던 거잖아요?

이미 그때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사용된 것이라는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하여 어떤 법률적인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셨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평준화 정책에 관련되는 논문이 언론에 보도됐을 당시 저희의 판단은 공동 연구원으로 들어갔던 전 저희 원 연구위원, 공주대학의 이명희 교수가 퇴직하면서 연구원에 재직했을 때 취득한 연구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공동 연구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연구보고서 쓰는데 참여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자체도 물론 비밀 업무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소위 평준화 정책하고 관련되는 연구와 발표들이 언론기관을 통해 여러 군데에서 여러 주장들이 복잡하게 나올 당시이기 때문에 흔히 학술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나올 수

있는 주장인 것으로 저희도 언론에 가서 반박하면서 시사저널 같은 것을 통해서 지상토론도 벌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 사실 자체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위반이나 하는 것을 저희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한 상태에서 소위 언론을 통한 논쟁이 잠잠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의 판단으로 법적 조치는 보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이 문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그 당시 이미 2001년 학업 성취도 원자료가 전체 그대로 연구진에 넘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 법률적 조치를 검토하셨는데 원장님의 판단으로 법률적 조치를 진행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류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다음 논리적인 반박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이러저러하게 진행하신 거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당시 언론 보도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죽 검색해 보니까 그 당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산하 교육개혁연구소 내지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이름으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KDI 국제정책대학원 또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산하 교육개혁연구소들이 공식적으로 직제상 존재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도 보고자료에 KDI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KDI 국제정책대학원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공식적인 연구 결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KDI 국제정책대학원 산하의 교육개혁연구소는 공식적인 직제가 아니다, 말하자면 임의로 설립한 연구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공식 기관 차원에서 자료를 건네주는 것도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것도 제한된 범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이전에 개별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명희 교수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부연구위원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네 분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분이 같이 관계되어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명희 부연구위원만을 법률적인 대상으로 검토하신 것인지 나머지

세 분까지도 검토하신 것인지, 만약 나머지 세 분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KDI 자체가 공식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사실 국제정책 대학원과 교육개혁연구소는 당연히 KDI에 소속된 부설기구라고 믿었고 또 똑같은 국책기관의 부설 연구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일일이 확인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당연히 부설 연구기관으로 생각했고, 네 분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 이명희 교수를 제외한 다른 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구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이명희 교수가 자기가 거기 참여하면서 연구 자료를 사용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다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알아보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은 추가로 확인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 또 그때 유출된 자료를 유출 경로를 통해서 회수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그 당시 이명희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분까지 포함해서 전체 네 분의 문제로 검토가 됐으면 그 중의 한 분이 다시 9월에 발표되는 연구 논문의 과정에서 그 자료를 다시 반복해서 사용하는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이명희 교수 한 분의 문제로만 됐기 때문에, 나머지 세 분의 문제들이 벗어나 있음으로 인해서 그 중의 한 분이 또다시 이 자료를 재활용하는 과정들이 반복된 것 아니냐 이런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격 자체도 말하자면 불법 유출된 것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조치들을 간과해 버렸다, 이런 판단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의 불찰이었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로는 자료가 패키지로 연구진에게 넘어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이명희 교수가 공동 연구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필한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자신의 불찰이었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따가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이군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문제라고 그럴까 쟁점이 대략 세 가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연구 결과하고 평준화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이주호 위원이 발표한 이 자료만 갖고 평준화가 실패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다소 미약하다 하더라도 이 자료를 보면 학교 간의 격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팩트로, 적어도 교육 상임위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간 격차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평준화 정책의…… 74년 이후에 30년이나 되었습니다. 사이클이 세 번이나 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학에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3~5년 주기로 전체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중학교는 69년부터 준비하고 시작했으니까 30년도 넘은 셈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평준화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실증적 연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의 교육시스템과 교육의 틀을 이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기본 생각은 우리가 평준화의 틀을 크게 유지하더라도 학생의 개성과 교육의 수월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틀의 보완을 차제에 쟁점화해서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료 유출과 관련된 문제인데 학교를 적어도 프로그램별로, 다른 말로 하면 과목별, 서브젝트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각 학교마다 특성을 반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수능과 내신에 대해서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수능은 앞으로 바뀌는 제도에서 유명무실화되고, 내신을 쓰라고 하지만 학교 격차가 제가 첫 번째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엄연한 팩트로 존재하는 한 대학이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뽑으라는 것입니까? 학교마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에 학생 선발권과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언론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정보 유출하고 학력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학업성취도의 평가와 비교·연구·개선에 대한 정보를 누가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선진국을 달리고 있는 나라들은 내셔널 어취브먼트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해서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분석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를 납득할 만큼 공개하지 않는 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왜곡된 모양으로, 빼내서 자료 분석을 하는 아주 왜곡된 형태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규정에 못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흘러 나가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본다면 이런 정보가 전문가에게, 또 상임위 위원들에게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부모와 학생 등 알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학생 하나하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또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어떤 평준화,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위해서 분석했다고 한다면 정보 유출에 대해서 족쇄를 채우고 있는 현재의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료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의논해서 하면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하는데 명백하게 현행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부분까지 옹호하시는 방향의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

해서는…… 우리가 입법기관인데 그런 점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인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가 지난번 이주호 위원께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돌리심으로써 시작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 질의 속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그 부분은 불가피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장님께 몇 가지 간단한 사실 확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전 원장님 계실 때인데 2002년 5월에 200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된 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2002년 5월에 어디로부터요?

○**유기홍 위원** 나중에 공동 연구를 하게 된, 아마 KDI 이름으로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시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셨던 이주호 위원, 그리고 김태중 교수, 이런 분들로부터 2002년 5월에 자료제공 요청이 있었는데 당시 김성동 전 원장께서 거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그 부분은 저로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기홍 위원** 제가 확인을 한 것이니까 아마 맞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십시오. 대개 이 시기가 이명희 교수를 통해서 자료가 유출되었던 시기가 아닌가 하는 점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2002년 8월 31일 이명희 연구원이 퇴직했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리고 2004년 2월 23일 이주호 당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4인의 공동 연구로 논문이 발표된 사실이 있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래서 2월 23일에 이명희 교수에게 자료를 유출했는가를 직접 확인하셨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평가본부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평가본부장에게 보고를 받았 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래서 3월에 이명희 교수가 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그랬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리고 아까 이인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교육과정평가원에

서 이명희 교수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그렇습니다.

○**유기흥 위원** 그리고 같은 원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주호 위원의 보도자료가 9월 9일에 언론에 공개되었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그렇습니다.

○**유기흥 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1년에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원자료는 학년, 급, 시·도 교육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등 도시 규모, 그리고 시·도 교육청 내 학교번호가 포함된 학교 코드하고 학생들의 반·번호·성별·성명까지 포함된 학생 아이디, 그다음에 채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원자료이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그렇습니다. 원자료 전체에는 그런 학생들의 아이디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흥 위원** 이명희 교수가 유출한 자료가 어떤 것입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로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방금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연구에 같이 참여했던 이명희 교수에게 이것을 다시 확인했는데 이명희 교수 자체도 어디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를 확실하게 기억 못 한다는 답변을 받고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밝혀야 될 하나의 과제입니다.

○**유기흥 위원** 그 점과 관련해서는 좀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자료가 패키지공공 연구원들에게 제공되었다면 모든 자료들이 다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을 더 거쳐봐야 되겠습니다.

○**유기흥 위원** 제가 듣기로는 학생의 성명까지 코드화되어서 들어 있는 자료가 있고 이름은 빠져 있지만 반·번호·성별까지는 들어있는 자료, 이런 중에서 어느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지 어찌되었건 유출된 자료는 이름이 있건 없건 그 학생의 학교·반·번호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학생의 성적인가를 아이덴티파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자료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기흥 위원** 사실 그 점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2월의 논문연구 결과와 지난 9월 신문에 보도된 분석 결과는 완벽한 원자료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원자료 전체를 유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명희 교수가 패키지라고 표현하는데 이명희 교수가 자료를 가져갈 때에는 원자료를 가져가지 그 원자료 중에서 어느 것을 일부러 작업해서 빼서 나머지를 가져가지는 않았겠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시다마는, 물론 추정입니다마는 2월 당시에 이명희 교수와 얘기하기로는 이명희 교수가 공동 연구원의 일원으로서 집필에 참여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보도가 되고 난 뒤에 이명희 교수로부터 다시 재차 확인한 결과 그 당시에 자료를 그대로 공동 연구진에 넘겨주었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추정컨대 자료 전체가 넘어간 것이 아니냐, 다만 그 자료 속에 무엇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이명희 교수 당사자도 기억하기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기흥 위원**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대로 751개 학교, 총 2만 9885명에 관한 자료입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을 밝히면서 절대로 학생 개인과 학교의 개별 성적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표집조사에 응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그렇습니다.

○**유기흥 위원** 결과적으로는 교육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교육부가 약속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으면서 위탁·수탁 계약사항에 그렇게 약속한 것으로……

○**유기흥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 이름까지 들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반·번호·성별까지 해서 사실상 누구 성적이 어떻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3만 명에 달하는 자료가 유출된 것인데요.

현재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 누구입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이명희 교수가 이번에 진술하기로는 공동 연구진의 한 분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어떻게 더 확대 재생산되어서 활용되었는지의 여부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유기홍 위원 이런 것입니다. 성적표는 자기 친구한테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 성적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것인데 어떤 자료를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조차 아직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대단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가 여기에서 끝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원자료에 보면 학교·학급·반·번호·성별·성명이 명기되어 있고 5개 교과목들 점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정보 유출이고 정보인권의 심각한 침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 컴퓨터 속에 이 3만 명분의 성적표가 들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자 정보인권의 침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해서 위탁자인 시·도 교육청, 그리고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홍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시인한 이명희 교수가 직접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입장을 밝혀야만 이 문제가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이러한 심각한 정보인권의 침해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차체에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예,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이주호 위원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의 내용 중에 사실은 제가 아니면 답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위원께서도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거기에 보면 제 컴퓨터 안에 개인 이름과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한 정보들이 다 들어 있다고 되어 있고 질의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 컴퓨터 파일에는……

○정봉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용과 연동된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면 다음 기회에 본인이 질의할 때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이주호 위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위원 다음에 질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유기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과 다르다는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 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저도 관련되어서 의사진행발언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가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명희 교수가 유출한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출한 자료가 아까 원장님께서 추정하시기에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두 종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 중의 어떤 자료에도 학교, 반, 번호, 성별…… 사실상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유출되었습니다.

○진수희 위원 이따 추가질의에서 토론하시지요.

○유기홍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지금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알기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주호 위원 그 부분도 제가 발언할 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과정평가원의 보고와 그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의사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는 지금 보고한 평가원장께 해 주시고, 평가원의 업무에 관한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 위원들 상호간에 질의나 응답을 하시거나 토론을 하시는 것은 오늘 일정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양지하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진수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 위원** 진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자료 공개 이후에 진행되는 이 논란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안의 본질은 제쳐 놓고 너무나 비본질적인 사항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교육부라든지 교육과정평가원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 조직에 실망을 굉장히 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내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한 가지 의혹을 저는 강하게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교육부장관께 묻습니다.

아까 모두에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초기 대응이 미흡하였음을 사과드린다고 하셨는데,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것은 분명하게 정보 유출과 연관됩니다.

그런데 정보 유출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나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확실한 조치랄까 대응이 있었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진수희 위원** 저는 교육부가 자료 유출에 대해서 대응 운운할 것이 아니고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실태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은 국가 차원에서 학업 성취도를 파악해서 교육 과정과 교육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렇다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매년 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 조사를 하고 분석한 다음에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지 그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우선 연구 조사는 중요한 교과에 대한 학력의 추이 변화를 주로 조사하고요. 사회·경제적인 변인이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하는 것을 살펴 보고요. 또 이것이 우리가 교과 과정을 편성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어떤 면을 고려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렇다면 지역 간 학력 격차가 발견되었을 시 그것을 줄이려는 정책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이 조사 목적의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물론입니다.

○**진수희 위원** 지금 공개를 공식적으로는 안 하셨지만 분명히 평가원 자체에서는 분석을 하셨고요. 그 분석 결과 지역 간 학력 격차가 어떤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부에 보고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진수희 위원** 무슨 얘기세요? 평가 결과 연구 보고서가 교육인적자원부 및 16개 시·도 교육청으로 가고 있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보고서는 갑니다.

○**진수희 위원** 그러면 교육부 본부에서도 이 결과를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교육 정책에 당연히 반영해야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격차나 학교 격차,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정보 인권은 물론이고요, 이런 것이 드러나는 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당초부터 삼갔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런데 지금 평준화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면 교육부 본부에서는 정말로 이 자료를 통해서 지역 간 학력 격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책

담당자들의 당연한 태도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파악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파악되었을 경우 다음 해, 그 다음 해 교육 과정에 어떤 정책 수단으로 어느 정도나 구체적으로 접근하셨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지역 간 학력 격차는 얼마간 있습니다.

그런데 실증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난 30년간 중요한 정책을 시도한 결과 사실상 지역 간 편차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올해부터 실증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서 학력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렇다면 2001년과 2002년 조사 결과는 아직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평가위원장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2002년 것은 아까 자료로 보고 말씀드린 대로 2002년 연말에 보고가 완성되어서……

○진수희 위원 그러면 장관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001년 조사 결과가 2002년 교육 정책에 반영되고, 2002년 조사 결과가 2003년에 반영되는 식으로 프로그램스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어디까지나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밝혀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 수준에서 교육 과정이 제시하는 성취 기준을 어느 정도 달성하느냐에 맞추어서 표집을 하기 때문에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진수희 위원 그렇지만 전국적인 샘플 서베이를 하면 지역 간 실태가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지역 대표성이 있는 표집을 하지 않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랜덤

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제주에서 나온 고등학교 1학년의 어느 한 학급하고 서울에서 나온 고등학교 1학년의 어느 한 학급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수희 위원 저는 5억짜리 프로젝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 평준화 논란이 있는 만큼 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뭔가 실증적인 자료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는 이미 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자료에 그 부분이 드러나도록 조사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이 사건이 났을 때 평가원에서 무엇을 발표하셨는가하면 1% 샘플 서베이고 표집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아니, 5억짜리 프로젝트 설계를 하시면서 타당도가 그렇게 떨어지는 조사 설계를 하셨단 말씀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연구 자료는 연구 목적에 부합되게 설계되어야 되고, 그 목적과 내용에 맞게 분석되고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르게 쓰이면 그것은 연구 목적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군현 위원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1% 비례 유층 군집 표집을 하셨어요. 비례 유층 군집 표집을 하면 통계적으로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딱 나타나고, 그러면 지역 간 비교를 하는 데 통계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두 단계로 저희가 표집을 하는데요.

○진수희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제 질의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되어야 되고, 평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할 필요도 없고요. 교육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느냐의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평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평가가 되면서 그 평가 결과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이것

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현행과 같은 고교 평준화 방식은 꺾데기만의 평준화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학교 배정만 평준화되었지 시설이라든지 교육 여건이라든지 학생들의 학력이라든지 그 부분은 절대로 평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 파악해서 시설이나 여건이 특별히 뒤떨어지고 학력이 처지는 학교는 교육부가 차별적으로 집중 지원을 해서 여건도 개선하고 좋은 선생님도 배치해서 학력을 올려서 상향 평준화—말하자면 실질적인 평준화—로 가자는 취지에서 우리는 공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개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떤 학생을 망신 주고 어떤 학교를 망신 주자는 이유가 전혀 아닙니다. 뒤떨어진 학교 올리자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사를 하려면 큰 액수의 조사니까 그 부분의 목적도 포함시켜서 조사를 설계하시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하셔야만 제대로 된 평준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일단 본 질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정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 질의에 앞서서, 질의하다 10초만 더 쓰시겠다고 그러면 10초 좀 누르세요, 거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10초 더 쓰겠다고 그러면 10초를 주든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제지를 하시든지……

○위원장 황우여 질의하십시오.

○정봉주 위원 저도 끝나고 나서 10초 더 쓰겠다고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10분이기 때문에 저는 자세하게 질의를 못 하겠는데, 지금 연구원의 전문연구원 나와 계신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정봉주 위원 질의를 하면 같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용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지난 2월 23일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당사자들을 불러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덮어 두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만약 제31조의 위법성이 발견되면 공소 시효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정부출연연구기

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상에 특별하게 공소 시효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준에 의해 적용……

○정봉주 위원 공소 시효가 아직 안 끝났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확실히 알아보아야 되겠습니까마는, 알고 난 뒤에 1년이라고……

○정봉주 위원 덮어 두는 것은 자체적인 판단이고,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월 23일까지 포함해서 이번 9월 9일, 10일 자료 결과 발표에 대해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평가원에서 반드시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더 확인하고요. 법률적, 추가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법성, 여기 제31조를 보게 되면 국가의 자료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월 23일, 저는 공소 시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묶어서 보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 이것이 연구되고 있었던 단위가 교육개혁연구소였습니다.

교육개혁연구소가 KDI 공식 연구소입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그 부분은 제가 어떻다고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봉주 위원 ‘예’ ‘아니요’ 하면 되지 답변드리기가 뭐 어렵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저는 KDI 산하기구인 줄로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런데 아니지요? 개인 몇몇이 모여서 만든 연구소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저로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현재는 어렵습니다.

○정봉주 위원 아니,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배포된 자료 4쪽을 보게 되면 “동 자료 유출 사실은 이 연구를 수행한 KDI에서”라고 했어요. 이것이 KDI의 공식 연구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그 부분도 저로서는 아니다, 기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봉주 위원 이것을 확인해서 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일단 위탁을 받아서 연구한 것의 자료 유출에도 문제가 있지만, 만약 공식 연구기관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로테이터를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두 가지 법적 검토를 좀 하시고, 결론으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일 발표 이후 교육부에서 1% 표집에 문제가 있다면서 표집 수를 3%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어 요.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정봉주 위원 무슨 근거로 3%로 늘리겠다고 한 것입니까?

연구원이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총리께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오히려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표집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학력 평가를 하는 데 미흡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별 학력 격차를 비교하는 데 미흡하다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당연히 국가 전체의 학력을 비교하는 데도 충분치는 않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 저희는 이것 자체가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학력을 비교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국가 전체의 학력을 평가하는 것은 옳은데, 지역별·학교별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보고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 상황을 조금 설명하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수 조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면 조사위에서 꽤 많은 것도 알아낼 수가 있어서 전수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것이 굉장히 힘든 암초가 되어서 난항을 겪다가 말하자면 3%로 합의한 셈이었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러니까 이 이전에 이미 3%로 결정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전수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어렵게 되어서 3%로 협의가 됐습니다. 6월의 일이었습니다.

○정봉주 위원 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도 자료를 보면, 학교 간 학력 차이는 전세계 어느 나라나 다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러면 학교 간 학력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평준화 정책의 실패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렇게 보지 않지요?

평준화 정책의 정확한 비교는 평준화 정책 시행 이전의 학생들을 종단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후의 학생들을 종단 분석하면서 종단 분석에서 나온 결과의 차이가 심해질 경우 평준화 정책이 실패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정봉주 위원 학교 간 학력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것이 평준화 정책의 실패로 반드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물론입니다.

○정봉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OECD PISA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학교 간 학력 차이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작은 국가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그렇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리고 수치를 보게 되면 학교 간 차이가 19.7%, 국제 수준이 36.2%인데 19.7%가 갖는 의미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그 부분은 저희 전문가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평가연구본부전문연구원 김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각종 변인들 간의 설명량을 얘기할 때 그 기준을 만약 100%로 둔다면 학교가 설명할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설명량이 19.7%라고 얘기할 수 있

는 것이고요.

OECD 국제 수준에서의 평균이 36.2%로 보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읽기 영역에 한해서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학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봉주 위원 읽기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학력 차이가 작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평가연구본부전문연구원 김경희 학교가 학생의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양이 국제 수준의 평균치보다 밑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연구원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6개 시·도 교육청과 지역구별 학력 차는 이주호 위원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신뢰성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평가연구본부전문연구원 김경희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파악하는데 1%가 부족되는, 신뢰성이 낮은 데이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2000년에는 0.5%였는데 2001년부터 1%로 표집 규모를 늘렸는데 그 배경이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자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자문을 받은 결과 1%의 표집 크기가 적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1%로 보고 있고, 그것은 팀스나 피사(PISA) 연구, OECD 국제 비교 연구입니다. 저희 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인데 그 연구에서도 그 정도의 표집 규모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수준을 파악하는데는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지 시·도 단위로 지역별 혹은 서울 지역 내에서의 지역구별로 비교하는데는 부족하고 신뢰 있는 데이터를 산출하기 어려운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 이번 자료를 보면 학교를 비교하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일반 고등학교하고 과학고,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평면 비교했습니다. 학교 간 학력 차이를 비교하는데 이 비교 방법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5개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것이 학생들이 학교 들어갈 때 조건도 틀리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틀린데 과연 특수목적고 아이들과 일반고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평면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맞는 근거입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평가연구본부전문연구원 김경희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할 때는 종단적 혹은 횡단적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봉주 위원 평가원장님, 학력 격차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업계 고등학교도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정봉주 위원 상위 10%에 1명도 속해 있지 않은 학교가 69개교라고 발표했어요. 그 중 44개 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지요?

과연 이런 수치나 데이터를 갖고 학교 간 학력 격차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국가 수준의 성취도 평가는 지역 간, 학교 간 횡단 비교 분석을 하고 또 비평준화 지역, 평준화 지역의 종단 분석을 해서 얼마나 향상됐느냐 덜 됐느냐 하는 분석을 하는 데는 전혀 맞지 않는 연구 설계입니다.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저희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연구 목적을 달리 하고 설계도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정봉주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학생의 평가)에서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7차 교육 과정을 보면 교육 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서 국가 수준에서 주기적으로 학생의 학력 평가, 교육기관 평가, 교육 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과 목표와 내용을 제대로 학습하였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표집해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개를 했는데 맞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 평가원의 연구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초·중·고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또 교육 과정의 정착 정도, 교육 과정의 타당성, 적절성을 평가하고 또 교수 학습 및 장학 정책 수립에 실증적인 자료로도 산출하고 초·중·고 단계에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국민 공통 기초 학력에 대한 성취도를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평가원의 기능이라고 그럴까 막대한 인원이 있는데, 원장 1인과 연구원 76인이 맞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총 인원 140명 맞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막대한 인원을 평가원에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8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저희 평가원은 99년도에 발족되었고 98년도는 국립교육평가원으로 기관이 다릅니다.

○**김영숙 위원** 어쨌든 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9년이지만 그렇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2001년도부터 매년 실시하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평가보고서는 전부 공개하고,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정책 건의 자료는 아니고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보고서이기 때문에 주로 이 자료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분은 선생님들이라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교수 학습에서 연구보고서를 활용해서 교수의 방법이라든가 학생들의 성적에 미치는 배경 변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많이 현장에서 활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지요. 정책에 반영 안 하면, 엄연히 정책에 반영한다고 목적에 해 놓았는데 아닌 것은 뭐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매년 무슨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김영숙 위원**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하면 학력이라든가 변화 추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매년 그 연도에 평가 분석해서 그다음에 활용하는, 이쪽은 미흡하다고 하면 보강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매년 하는 것이 맞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그래서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중단 분석을 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말을 아까……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서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김영숙 위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각 시·도별로 여러 가지 격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학력 평가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영국, 미국은 주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스웨덴 등에서는 공개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김영숙 위원** 이번에 공개한 것이 지역 간, 학교 간의 학력 편차가 굉장한데, 보도에 따르면 많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료 아래 실증 자료는 못 봤으니 보도에 의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 그것을 당연히 교육부에 제공했겠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보고서를 제공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교육부는 나중에 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학력 격차를 논하기에 표본 집단이 너무 적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에 응한 학교 간의 학력 차가 극심하게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연구는 학교 간, 지역 간 횡단 비교를 하기 위한 연구는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은 맞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격차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그 격차를 접수 그대로 인정하기는 그 지역이나 또는 시·군·구별 대표되는 학급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는 얘기

입니다.

○**김영숙 위원** 시·도 교육청이 의뢰하는 시험의 수행을 평가원에서 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엄연히 16개 시·도 교육청의 위탁으로, 평가원에서 수탁 사업으로 연구 수행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시·도별에서는 평가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했으면 16개 시·도는 자기 시·도의 학력이 어디인가 당연히 관심을 갖지요. 그것을 가져야만 그 시·도의 학력이, 우리 애들이 급별로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피드백해서 아이들 학습에 보강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연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연구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제 말을 잘 분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시·도 간, 지역 간 비교를 하기 위한 연구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지요. 시·도 간 비교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 시·도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위해서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알아야 되니까 한 16개 시·도를 한꺼번에 끌어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되고 서울시교육청의 지역 간 격차가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료 분석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분석을 해야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시·도 간의 학력격차를 분석하려면 그 시·도의 대표성 있는 표집을 해야 되는데 그 시·도를 대표하는 학급을 표집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1%로 했지 않습니까? 1%를 한 것도 평가분석이지요, 무슨 소리예요? 1%는 평가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러 5억을 들여 가지고 합니까? 국가 재정 낭비 아닙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을 뭐 하러 합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지금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으로……

○**김영숙 위원** 아니,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5억이나 들여 가지고 뭐 하러 합니까? 그렇지요?

평가원의 교육평가연구본부장이 2001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가지고 평준화 정책을 실패

한 정책이라고 논하기에는 표본집단의 규모가 전체 재학생의 1%에 불과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했는데 신빙성이 없는 조사를 왜 하는지, 그렇다면 나랏돈만 낭비해 온 것에 불과한 것 아닌지 답변해 주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평준화 정책의 성패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연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김영숙 위원** 어떤 목적인지 잘 보시고 제 말을 분석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10월 20일, 21일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고교의 경우 표본학생 수를 1%에서 3%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올해 자료는 신뢰성과 대표성의 논란 없이 확실히 학력격차 비교 자료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시·도 간, 학교 간, 시·군·구 간 학력격차를 비교하는 자료로서는 전혀 설계가 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는 학력 격차를 얘기했습니다. 시·도 간이 아닙니다. 시·도 안에서의 초등 그러면 그 지역 초등의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역시 금년 연구도 그런 횡단분석을 하는 연구 설계로서는 부족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무슨 자료로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목적이 무엇인지요? 무엇을 하려고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하는지요? 이 목적에 상반되는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8년도 전국 단위로 처음 실시한 이래 2001년, 2002년, 2003년 갈수록 학교 간의 학력 편차가 커지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지금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종단분석을 해야 나오는 자료입니다. 학생들의 성적 수준이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하는 분석은……

○**김영숙 위원** 각종 측면에서 분석을 해야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자료를 가지고는 절대 그런 분석을 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2004

년, 2005년, 2006년 가면서 중단분석을 하게 되면 학력이 올라가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떤 연구를 하면 그것만 하지 말고 다방면으로 유추해서, 어쨌든 간에 아이들 학력이 신장되고 교육의 질을 올릴 수 있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알 권리를 알면서 성취도에 도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교육과정 운영의 목적 아닙니까? 학교가 왜 있습니까? 그렇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연구를 더 심도 있게, 또 더 광범위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교육의 목표에 따라서 도달할 수 있는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고 아이들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수익자의 알 권리가 존중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학력격차 이것도 참 좋은 작용을 해 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저는 연구의 자료는 연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숙 위원** 연구를 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온 것 그 자체로만 알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활용은 선생님들과 시·도 교육청에서 여러 장학지도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 얘기는 단위학교에서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간에 장학을 통해서도 알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학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위원**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해를 넓히셔야 되는데 다들 자리를 떠버려 가지고 좀 유감입니다.

지금 논쟁이 이해의 차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평준화가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를 보려면 평준화하기 전 학생들의 성취도와 평준화한 이후에 조사한 것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평준화 이후에는 평준화 이전 학생들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평준화되어 있는 지역의 학생들과 평준화되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을 비교해야 됩니다. 단 이 두 샘플은 평준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학생들을 100명이면 100명을 뽑고 평준화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100명이면 100명을 뽑는데 이 두 집단은 평준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제외하고 모든 조건이 같아야 됩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말하면 통제한다고 그러합니다.

다른 변수는 전부 같다고 하고 이 두 집단이, 평준화된 집단과 되지 않은 집단의 차이만 가지고 결과의 차이가 오면 그것을 평준화의 영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얘기가 되풀이되는데 지금 이 연구는 개인 수준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국가적으로 측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비교한다면 이것을 인디비주얼리스트릭 오류를 범한다고 그러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들의 특징을 가지고 집단의 특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라는 것이지요.

설계가 다르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나, 개인을 측정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집단 간의 차이를 보려고 했느냐, 따라서 이것은 연구 설계가 무엇이나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연구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비평준화 지역 학생과 평준화 지역 학생의 성적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그러한 리서치 디자인을 해서 연구할 필요는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닌 개인들의 성취도를 보려고 수집했던 자료를 가지고 집단 간의 얘기를 하니깐 이것은 문제다……

A학교와 B학교의 학생을 비교했을 때 학교 간 성적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500명의 학생을 A학교에서 샘플링하고 또 500명의 학생을 B학교에서 샘플링해 가지고 이 학생들 간에 차이가 있으면 그 학교 간에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500명의 A집단과 500명의 B집단이

학교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는 같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전문기관이 왜 그 설명을 제대로 못 하세요? 지금 내가 듣기로는 전국을 놓고 랜덤 샘플링을 한다고 하면 1만 명을 조사하든 100만 명을 조사하든 개인들이 어느 정도의 성취를 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조사 가지고는 집단 간의 차이는 분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원래 무슨 목적으로 샘플링했느냐를 가지고 이 자료를 잘못 해석했는지 어쨌는지 논의해야 되고, 만약 평준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이 성적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내서 정책을 바꾸려면 그 목적에 맞도록 샘플링을 하고 연구해서 결과를 찾고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답답하고 또 답답한 것은 뭐냐, 이 고교평준화가 언제 됐느냐 하면 1974년 유신정권에서 한 것입니다.

그때 정치적 의도에서 했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 뒤 수십 년 동안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는 있었지만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다시 입시지옥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30년이 된 이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입시지옥이 현재도 심한데 고등학교와 중학교까지 갈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자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개선을 하자고 하는 점에서야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개선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자꾸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정부나 교육과정평가원이 정말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평준화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 유출했던 자료를 되돌려 받았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아직 되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지병문 위원** 뭐 하느라고 지금까지 되돌려 받지 않았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유출 경로를 추적해서 회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법적 조치는 취했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병문 위원** 아니, 지난 2월 24일에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가지고 그때도 난리가 났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우리 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혼란을 느끼고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에 손상이 갈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지금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발생한 지 한 1주일 가까이 되는데 검토만 하고 있고…… 빨리 고발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앞에 이군현 위원께서도 지적하셨고 일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저는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자료가 유출되어 가지고 잘못 이용되고 악용되고 의도적으로 이것이 다른 목적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과정에 개입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고발해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할 부분이 있으면 해결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 자료를 제대로 분석해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하고 정말로 이 자료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의 자료수집 목표 자체나 리서치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개선을 원하고 정부로서도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그 목표에 맞는 연구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고발할 것은 고발해 가지고 처리할 일이지 이것이 유출이 되었느냐,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자꾸 보도자료를 내면 국민들은 정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인영 위원이나 정봉주 위원, 유기홍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지난 2월 23일에 발표했던, 소위 KDI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것처럼 했다는 그 연구의 주체는 예를 들면 교육개혁연구소인데 그것은 KDI 산하기관이 아니고 연구하는 몇 분들이 만든 연구소다…… 저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확인한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난 2월 23일에 적극적으로 제대로 대응했느냐…… 어디에서 무슨 자료를 어떻게 분석해서 냈느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지금 국민은 KDI가 가지고 있는 소위 인지도 때문에 지역 간, 학교 간 차이가 있고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못 한 것처럼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과정평가원은 이것이 KDI가 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잘 알겠습니다.

○**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이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위원** 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가원장께서는 제가 발표한 이후에 반박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학교 간 차이가 국제 수준보다 매우 작다는 자료를 내셨는데 실제로 평균을 보면 우리나라가 19.7이고 그쪽이 평균 36.2니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실제로 죽 조사된 다른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들 중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학교 간 차이가 작은 나라들이 여덟 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을 보면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캐나다 아일랜드 덴마크 순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사실 우리처럼 획일적인 교육정책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인구 동질성이나 모국어 사용 면에서도 사실 우리와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우 형평이 높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숫자가 19.7로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학교 간 차이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학교 간 격차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평준화 제도라는 아주 획일적이고 상당히 극단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학교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저는 평준화 정책을……

○**이주호 위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기본적으로 설

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성취목표……

○**이주호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그 자료가 여기에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저희가 발표한 자료에서 학교 간 차이를 보여준 것이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저는 연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주호 위원** 계속 연구 목적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뭘니까?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위원**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의 학업성취도 평가로 여러 가지 목적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계속 똑같은 답을 반복하시는데요……

(황우여 위원장, 조배숙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도 교육청과 지역별 학력차에 신뢰성이 적다’ 이렇게 또 반박하셨지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 간 격차는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 간 격차는 샘플이 1%이기 때문에 사실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통계학을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통계를 보여 줄 때는 충분히 신뢰도가 있는 것을 보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교 간 지역별 차이는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지역별 성적과 중학교의 지역별 성적에 코릴레이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반박 자료를 내실 때 ‘고교의 지역별 순위가 매년 변동하니까 이 자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고교의 지역 간 격차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주장하지 않은 것을 반박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그 부분은 저희 전문가로 하여금……

○이주호 위원 됐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장관 대답하시지요.

저희가 2002·2003년 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맞습니다.

○이주호 위원 지금 제가 배포한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이 자료를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여러 번 줄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공을 들여왔는데 결국은 안 주시는 것으로 하셨지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맞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런데 국회법을 보시면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기밀이 아니면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압니다.

○이주호 위원 그러면 장관께서는 지금 국회법을 어기고 계신 것도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왜 안 찼느냐고 그렇게 물어 주십시오.

○이주호 위원 그러면 국회법을 어긴 것을 시인한 것으로 알고…… 왜 안 주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시인 안했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러면 왜 안 주셨는지 답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원자료, CD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학업성취도에 대한 원자료, CD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혹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규정되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그래도 연구자가 요구한다고 그냥 드리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위원께서는 평준화 문제를 논구하기 위해서 이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항상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평준화 연구에 적절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학력에 대한 자료를 지금 교

육부에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비교하고 심지어 영국에서는 리그 테이블까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때 아주 유용한 자료로 쓰게 합니다. 지역별 격차를 나타내는 자료는 물론 훨씬 더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 자료를 줄 수 없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정부의 편의에 따라서 자료를 주고, ‘이것은 공개되면 불편할 것이니까 안 주겠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 학부모들이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공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국회가 그것을 판단해서 공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2002년 2003년 자료는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의 발표가 된 다음에 고교등급제에 대한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고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장관께서는 고교등급제가 절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맞습니다.

○이주호 위원 사실 저도 지금의 고교등급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등급제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대학의 내신 반영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대학들이 고교를 인성교육이나 특성화교육까지 굉장히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학생을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신이 강화되는 것인데, 장관께서는 지금의 고교등급제는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좀 대학에 자율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대학의 자율을 조금씩 늘려갈 생각입니다. 지금도 대학에 대단히 많은 자율을 주고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대학의 자율을 늘려가는 것과 동시에 대학이 고교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도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이주호 위원 사실은 고교등급제를 지금처럼 일

를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자료가 공개된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학교 간 차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고교등급제를 그냥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내신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료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해서 장관께서 보다 유연하게, 지금의 일률적인 고교등급제는 문제가 있지만 학교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을 주고 거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정도의 유연성은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교과기록을 통해서 학교 간의 차이를 드러나게 하는 방법보다는 예컨대 내신이라든가 수능이라든가 심층면접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비교과기록 전부를 조화 있게, 슬기롭게 활용해서 학교의 프로그램의 차이나 개인의 차이를 찾아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교등급화는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등급제 혹은 등급화를 함께 인정하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위원**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배숙** 이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었는데요.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자료공개 여부는 여러 가지 합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국가정책과 연동된 부분인데…… 그리고 부총리께서 지금이 자리에 출석하신 것은 교육 부분과 자료 유출에 관한 보고 및 질의를 받기 위해서……

○**이주호 위원** 추가질의 때 하시지요. 그것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정봉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셨는데 “국회법을 위반한 것을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시인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늘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은 상호 간에 기본적인 존경의 마음과 이런 것을 일정하게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발언 하나하고, 두 번째 지금 정확한 안건이 ‘2001년도 국가수준 학력평가 자료에 관한 보고’입니다. 여기에

서 이 안건과 무관하게 교육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 고교등급제를 한다든지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본 안건의 취지와 빗나가게 되면 위원장께서 일정하게 제지하시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주호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배숙** 이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주호 위원** 제가 장관께 결례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장관께서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추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봉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까마는 평준화라든지 고교등급제가 사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조사 발표가 난 이후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굉장히 불붙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배숙** 양당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의제와 관련된 질의를 해서 효율적인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법정입니다. 그래서 ‘시인하라’든지 이런 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최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말 좀 잘 가려서 합시다. ‘추궁’ 이런 말도 사실 문제 있는 말입니다. 한나라당 위원님들 숫자가 적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조심해서 쓰고, 상임위 품위도 있고 하니까……

○**김영숙 위원** 아니, 한나라당 위원이……

○**위원장대리 조배숙** 최재성 위원님 발언 중입니다.

○**최재성 위원** 자기 발언 순서에 하세요.

부총리가 앞에 나와 계신데 그런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시고도 또 ‘그래서 내가 추궁한 것’이라고…… 무슨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뭘 했습니까? 정책적 판단에 대한 질의나 이런 것은 추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평가위원장님께 물졌는데 이 조사에서 전체 표본수를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뭡니까? 전체 표본수가 몇 개이고 설정 이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사실 그 부분은

부총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국의 사례를 많이 드는데 영국의 경우는 법제화가 되어 있고 전수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수평가된 것을 학교별로 점수를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총리님의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1%로 한 것은 사실은 1%가 만족스럽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역 간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전국 단위로 봐서 교육과정이 정하는 성취 기준을 파악하는 데는 1% 수준도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1%를 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크기를 크게 하면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것은 아까 지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전수조사를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표본 수를 늘린다고 서베이에서 정교한 조사가 되고 꼭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샘플 할당 방법도 평가원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이 조사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할당 방법을 자료에서는 유층 표본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단계 층화 표본 표출을 했습니다. 시·도별 전체 학생 수에 따라서 1%를 배정하고, 그 시·도에서 고등학교의 경우나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도 작년에 표집을 안 했던 학교 중에서 한 학교에 한 학급씩 차례대로 표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표본으로 추출되는 한 학급이 그 시·도의 대표는 아닙니다. 대표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뽑아서 전국적으로 1%를 하면 전국 학생들의 성취 수준은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다음에 종단 분석, 횡단 분석은 해당 사항 없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해당 사항 없습니다.

○**최재성 위원** 만약에 평준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할 경우 표본 수도 달라질 수 있고, 샘플 할당 방법도 달라질 수 있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표본 방법 전부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종단 분석, 횡단 분석 다 해야 됩니다.

○**최재성 위원** 학교 간 평가는 또 달라지는 거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또 달라집니다.

○**최재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표본 수나 샘플 할당 방법이나 전체 조사 설계의 틀이 다 달라진다는 생각인데, 맞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다음에 이주호 위원께서 활용한 표본 수가 3024개 샘플, 그렇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1만 사천몇 명 중에서 삼천몇 명을 지난 2월 논문에서……

○**최재성 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활용이라고 보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저희 원내의 전문가들이 이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 이렇게……

○**최재성 위원** 그러면 전체 샘플을 다 활용했을 때, 이 조사의 자료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1만 4700 샘플을 다 활용했을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최재성 위원** 그다음에 이중차감 회귀분석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적절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저희 전문가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평가연구본부전문연구원 김경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해당 방법이……

○**위원장대리 조배숙** 잠깐만요.

누구신지 성명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평가연구본부전문연구원 김경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문연구원 김경희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방법론은 정책 이전과 이후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논문의 수식 등을 저희가 검토

해 봤을 때 측정치 자체는 지금 고1과 고2를 비교하고 있는데 고1, 고2가 같은 학생이어야만 수식이 이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료에 그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렇지요.

조사하신 것을 이 방법에 의해서 가공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용하는 데 적절치 않은 방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평가연구본부전문연구원 김경희 그렇지요. 적용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주호 위원께서 2월 23일 논문 발표를 하셨는데 평준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했고, 논문 제목도 그렇습니다. 9월 9일, 10일에 주장하신 것을 보면 학교 간 학력 격차를 얘기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한 학력 수준이 높다고 주장한 학교들은 대부분 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교예요. 이것에 지금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거든요. 한 가지 자료를 가지고 평준화 평가도 하고 학교 간 학력 격차에 대한 언급도 했던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봅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 위원 이 자료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2월 23일에 연구 논문 발표한 것과 9월 9일, 10일에 발표한 것은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 논리적으로 자승자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2월 23일은 비평준화 지역이 평준화 지역보다 학력 상승 요인이 0.3%p만큼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고, 9월 9일은 대도시의 학교들이 훨씬 높은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평준화 정책이 결국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주호 위원의 두 발표를 비교해 보면 스스로 주장한 꼴이 되어 버렸는데, 원장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그 부분까지 저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렇습니다. 잘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군현 위원님께서 이주호 위원님의 아규먼트가 평준화 정책의 평가로는 부적절하지만 학교의 학력 격차를 이제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그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주호 위원 논문 제목 자체가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거든요.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의·주장이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원장님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그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최재성 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자료임을 관련 학계나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워낙 오랜 역사 동안 이 부분을 연구하는 교육학계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또 여기에 관련되는 학교와 선생님들도 그것은 당연히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 이미 인식이 다 되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이명희 교수가 이 자료를 임의로 불법적으로 유출해서 논문에 활용을 했던 말이에요. 네 분이 공동 연구를 했어요. 다 교육 전문가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당시에 이 자료를 건네받을 때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공동 연구에 들어가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 있고, 교육 전문가는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지금 관련 학계나 이런 데에서는 다 불법성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이명희 교수는 불법성을 인식하고 유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배숙 최재성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최재성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백원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부총리님께 일괄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신문지상만 봤는데요.

첫 번째 질의는 대체 누가 30년간 이어온 평준화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나중에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누군가가 지금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30년간 유지해 온 평준화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간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정권을 죽이오면서 지켜 왔던 우리 국가의 중요한 시책과도 같았던 평준화 정책이 최근 들어 누군가에 의해서—특히 경제학자들에 의해서—조직적으로 공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5월 18일 나왔던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가 썼던 ‘평준화와 학업 성취’라고 하는 논문을 보니까 최근에 평준화 효과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연구라는 것이 있다면서 3개 정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사설 입시 기관인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김영일 교수가 했던 연구, 서울대사회과학연구원에서 했던 연구,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KDI 부설이라고 자칭 얘기되고 있는 교육개혁연구소, 이런 정도가 최근에 평준화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논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민간 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열린우리당에서 집요하게 질의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개혁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국가 기관이 아니다……

상당히 부도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04년 2월 23일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제목이 “KDI 국제정책대학원 대외협력실”이라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고—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이 실증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크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개혁연구소는 이주호 교수가 대학원 재직 중에 본인의 연구 활동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설립한 연구소이며,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공식적인 직제상 조직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총장님 명의의 공식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호 교수가 중심이 되어서 연구했던 2004년 2월 23일의 연구는 민간이 한 것이지 국가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언론들에 의해서 이 문제에 대

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국민적 기만극인데, 그 당시의 기사들을 보면 매일경제에서는 “국내 경제 정책의 싱크 탱크인 KDI가 발표한 것이어서 고교 평준화 정책의 논란을 재현시킬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KDI의 분석 결과 비평준화 지역 고교를 다니면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으로 분석”, 사설에서는 “KDI 결과로서 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지루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주호 교수의 발표에 의해서 중앙일보, 연합뉴스, 동아일보, 조선일보 모두에서 평준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기관이 한 연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 기관이 평준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총리님께서 이 문제의 논쟁이 자꾸만 가열되어서 평준화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국가 기관이 한 것이 아닙니다. 민간에서 사실로 한 것이고 경제학자들이 한 것입니다. 교육학자들이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항상 경제이익을 지고 지선으로 여기는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총리님께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자료는 KDI의 자료가 아니라 교수 몇 명의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30년간 이어왔던 평준화 정책의 근간이 허물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부총리님께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국가 전체가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평준화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속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의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많이 왜곡했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고, 그 왜곡된 자료의 기초가 됐던 원자료가 불법으로 유출됐다는 것도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으로 유출된 자료를 왜곡해서 의도적으로 평준화 정책을 공격하고 있는 것, 그리

고 이것이 마치 국가 기관에 의해서 발표·연구된 것인 양 호도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대처해 주셔야 되고, KDI를 관할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하고도 분명히 조정하셔서 이것은 국가 기관의 연구가 아니고 민간의 교수 개인들의 연구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머지 시간은 부총리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2월 당시 이주호 교수님 논문이 발표됐을 때 저는 KDI의 연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닌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위원님들로부터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제대로 조사를 못 했다는 말씀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백원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결의를 갖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준화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평준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주 조직적인 연구를 통해서 비판하려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직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평준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분은 저는 사실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쟁이나 수월성, 혹은 시장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념적으로 비판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자기의 사회적인 체험을 통해서 비판하는 분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한 많은 엘리트 계층이 자기의 성공 스토리를 갖고 이것이 제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준화 자체에 대한 비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백원우 위원 저는 국가 기관이 했다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겠습니다.

국가 기관이 어떤 공식적인 기관의 이름으로 혹은 기관의 노력을 통해서 평준화를 반대한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도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KDI가 연구한 것이라고 알게 되어 있고, 모든 언론에서 KDI의

자료라고 합니다. KDI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마치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 점은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원우 위원 아니, 밝혀졌습니다. 교육개혁연구소라는 것은 KDI에 의해 공식 조직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정서랄까, 국민들 생각을 조금 반영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서베이가 있습니다마는, 평준화에 대해서 한 70% 정도는 아직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평준화를 아직 지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판단은 평준화 정책이 적어도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화를 위해서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봐도 평준화가 사실상 학력 수준을 떨어뜨렸다고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볼 때 평준화의 기본적인 틀은 앞으로도 지켜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틀 안에서 평준화가 더 보완되고 개선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학교 배정만 해 놓고 교육 여건을 어느 정도 균등화하기 위해서 상투적인 노력만 하게 되면 평준화 체제가 자칫 화석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준화 체제 안에서 적당한 정도로 다양화, 특성화도 진행되고 경쟁적인 역동성이 조금 더 커졌으면 하고, 일종의 보편성이라든가 형평성을 추구하는 이념적인 평준화 체제의 제도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수월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곁들여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평준화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개선되고 개혁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원우 위원 다 10초씩 쓰셨습니다. 저도 10초만 쓰겠습니다.

누가 평준화를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안 주셨는데, 제가 자문자답하면 소수라고 생각하고 강남과 같은 부유층에 기반을 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한 경쟁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요. 평준화를 공격하는 그런 소수의 입장에 교육부와 국회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구논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논회 위원** 혹시 질의 중에 동료 위원의 성함이 나와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계획이 유출된 사안이 위법이나 아니냐 하는 부분을 자꾸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2001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계획안을 보았더니 국가교육과정 목표 달성 여부에 중점을 둔 평가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평가 결과는 국가 및 시·도 교육청의 정책 수립, 단위 학교에서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진로 지도 등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분명히 하면서, 특히 평가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별, 학교별, 교육청별 성적 미공개로,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성적 미공개로 피평가자의 부담이라든지 과열 경쟁이라든지 사교육비 증가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계획안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는 사안을 공개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깊숙이 연구하셨던 그 당시 교수님께서 이것을 발표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피평가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과열 경쟁을 유발하고 또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목표로 삼지는 않았다고 아까 발언하셨지만 그 문제를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교육과정평가원 책임 연구원이었던 이명희 교수가 2001년 평가 자료를 빼낸 채 2001년에 퇴직했고, 2004년 2월 이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비평준화가 평준화보다 학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요지의 논문을 한나라당 위원님, 이주호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의 교육개혁연구소 등과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구절이 들어 있느냐 하면, 평준화 지역 상위 20%의 중학생이 비평준화 지역 학교에서 1년만 공부하면 그 학생들이 10% 이내로 들 수 있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중·고등학교 전체의 평준화를 해체해야 된다는 정책적 함의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꾸 핵심을 비켜가려고 하고 다른 논점으로 가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마찬가지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KDI에서 불법적인 자료를 활용해 논문을 발표한 것 역시 법률에 저촉을 받아야 됨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백원우 위원** KDI가 아니고 사설 연구소예요.

○**구논회 위원** 그 문제는 백원우 위원과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실제 3월 11일 시사 저널에서, 한국교육연구평가원에 정구향 연구원이라고 계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계십니다.

○**구논회 위원** 이 양반이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KDI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일도 없으며 KDI가 몰래 자료를 빼내갔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불법성을 요하는 발언인데 평가원 측 연구원이 시사 저널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런 과문이 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다시 활용해서 보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언론에 배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편 한나라당 이주호 위원님의 최근의 그런 사태들은 그 자체로 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주호 위원님의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은데 이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주호 위원** 동료 위원한테 질의는 좀 삼가……

○**구논회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꼭 묻고 싶어요.

○**이주호 위원** 개인적으로 나중에 물으세요.

○**구논회 위원** 그 다음에 정부와 학계의 객관적이고도 치밀한 연구가 진행되기 전까지 적합하지 않은 어떤 연구 설계라고 하는, 그 반박들이 꽤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성 논의를 교육계에 발표함으로써 논란과 혼란을 국민들한테 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면서 질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성적을 미공개해서 피평가자의 부담과 과열 경쟁, 사교육비 증가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계획안에 발표를 했거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구논회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자료 유출 사실을 몰랐다고 하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만약 다른 자료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교육부나 평가원 측에서 답변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2002년도라든지 2003년도의 평가 자료들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지금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와 유사한 다른 미공개 자료들이 유출되었을 개연성에 대해서 전부 원내에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논회 위원** 그런 개연성에 대비해서 저는 이번 일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여쭙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모든 학생 자료들이 정보화·전산화되어서, 소위 NEIS나 CS나 SA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죽 하다가 결론을 내서 모든 학생 자료들을 정보화할 텐데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앞으로 NEIS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한국교육평가원장 정강정** 예, 잘 알겠습니다.

○**구논회 위원** 3월 11일 시사 저널 보도에 따르면, 2월 논문 발표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동일한 2001년도 학업성취도 기초 자료를 좀더 세밀히 분석해서 대응하기 위한 제대로 된 논문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가 있지요?

○**한국교육평가원장 정강정** 예.

○**구논회 위원** 실제 연구원들은 며칠 밤을 새워서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며칠 만에 중단되어 버렸거든요.

결국 교육부와 평가원이 중대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당사자 4명 중 이명희 교수의 사과가 있었고, 또 교육개혁연구소가 한국개발연구원 소속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해서 같은 국책 연구 기관들끼리의 어떤 논쟁을 국민들 앞에 보여 주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평가원의 그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오늘의 사태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반역사적인 탄핵 사태를 앞두고서 야당, 그 당시 야당이면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의 정치 공세가 절정에 이르

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주호 위원님께서서는 아마 정치권에 진입하려는 생각을 하셨던 시기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었는지 여부를 좀……

○**위원장 황우여** 구논회 위원님, 우리 상임위원회의 전통이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언급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동료 위원이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 주시든지 아니면 한번 또 질의하셨으니깐 잘 조절을 하셔서, 좀 이해를 구합니다.

○**구논회 위원** 아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가 이주호 위원님의 발표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의에 이주호 위원님 성함이 들어가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양해될 사항이라고 보기에 는 우리 관행이 그렇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논회 위원** 이미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또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구논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초기 대응을 미흡하게 함으로써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교육부와 평가원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책임지는 자세들을,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되었던 좀더 국민들한테 신뢰할 수 있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호함을 보여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무분별한 정략적 폭로 행위를 막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도 다시 한번 교육부와 평가원이 결의를 다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복기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왕 위원** 마지막이다 보니까 별로 드릴 말

숨이 없는데요,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 안보라는 것은 단순히 국방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 현재 우리 교육의 안보라고 한다면 그것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평준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시행해 온 평준화 정책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있는데 일부 정당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우리당 의원들의 개혁적인 의견에 대해서 국론을 분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안보 분야에 대해서 평준화에 흠집을 내고 파열음을 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교육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은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글썄, 교육 안보라는 개념으로 개념화할지는 제가 자신이 없고요. 평준화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의 대다수가 합의하고 있는 또 나라가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훼손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위원 원장님, 지난 2월 자료 유출된 것이 확인됐을 때 곧바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제반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놓고 지상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심사숙고했고 연구원 내외의 여러 분들에게 많은 자문도 받았습니다. 법적 조치로 가져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냐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 유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복기왕 위원 결국 유야무야하고 넘어가려고 하셨던 것 자체가 지금에 와서 평준화 정책을 겨냥하는 무기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말이지요.

초기에 평가원에서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거 동료였던 연구원들에 대한 온정주의가 발동해서 국가적 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온정주의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이명희 현 공주대 교수는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다가 안면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음으로 사과 과정에서 만났는데 평가원 직원이었다던 현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 전혀 온정적인 마음이 없었다고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로 가지 않은 것이 온정 때문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장이 일을 잘못 처리한 부분이 현시점까지 확대되어서 국민의 여론에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복기왕 위원 이명희 교수가 평가원에 다소 누가 되더라도 그리고 평가원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담은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요.

향후 평가원의 연구원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것들을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갔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개인의 소신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현 우리 연구원에 남아 있는 원내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보안 규정으로서 철저히 퇴직 시에 모든 연구 자료들을 회수하고 서약서를 징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연구 자료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지금까지 연구원의 자료 유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이번 사례 외에는 자료 유출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복기왕 위원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고 처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장을 크게 불러일으켰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만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학력 격차 자료 요청 일지’라는 유인물을 받았는데 학력 격차를 조사하는 평가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학력 격차 문제를 목적으로 한 연구는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계획은 없습니다.

○복기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표본 집단의 수가 적다는 말씀은 좀 논리가 약하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과학적인 조사 방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표본 집단의 크기를 가지고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연구 목적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일반에 공개했을 때 사회적 과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국정 공동의 책임을 동반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번 문제에 두 가지 정도 앞으로 긍정적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 자료 유출, 형법적으로 표현하면 장물인 것이고 그 장물을 취득해서 가공하고 어떻게든지 상품화시키려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 대책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이번 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리고 일부 드러난 각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학력 격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학력 격차를 좁혀낼 수 있을까, 이것이 고교 입시와 대학 입시 과정에서 어떻게 좀 해소시켜 낼 수 있을까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장시간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중복되지 않게끔 간단하게 원장께 묻겠습니다.

사실 학업 성취도 평가 시행 이후 결과보고서 이외의 자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최순영 위원 그리고 정책 활용도도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이 사업을 계속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사실 이 연구를 98년부터 99년까지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0년도부터입니다. 2003년까지 했고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마는 연구를 할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발전시켜서 표집도 좀 확대해 가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 과정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국가 수준에서 어느 나라나 하고 있고 저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매년의 연구 결과가 정책에 직접 직결되는 반영이 좀 부족하더라도 표집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순영 위원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비공개 때문에. 그렇다면 원 자료를 과감히 공개하고, 저는 현재 학력 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역 간 여러 가지 학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감히 공개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뭔지를 더 고민해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당연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은 학교 간, 같은 학교 내의 학급 간에도 또 교과목 간에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당연히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것을 점수화해서 공개하는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법제화를 토대로 공개해야 됩니다. 임의로 어느 연구원에서 일방적으로 연구해서 공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잘못 활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비평준화를 원하는 쪽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평준화 때문에 획일적인 교육이 문제라고 자주 지적하는데 획일적인 교육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순영 위원 제가 보기에 교육의 획일적인 문제는 대학에 가기 위한 수능시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과감히, 현재 학력 격차나 지역 격차가 있다면 이것은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평준화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평준화

가 더 잘 되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현재의 수능시험이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를 가져왔다는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다는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연구해서 2008년부터 수능시험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안이 이미 확정되어서 국민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개정안대로 잘 추진되면 수능시험이 제기했던 우리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어쨌든 간에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평준화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서 정책을 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최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하시지요.

○**김영숙 위원** 교육부가 한나라당 상임위원 7인이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을 통해서 요구한, 지금이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에 대해서 개인 정보 또는 개인 간, 학교 간, 지역 간 성적 비교나 서열 정보 등이 공개될 경우에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 경쟁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서 향후 국가 수준 및 전국 단위 평가 업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됨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6월 15일부터 무려 16회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8월 11일 자료를 제출했고, 그 안에 긍정적 검토를 한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요.

국회에서의 안전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행하는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동법 동조 단서를 보면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 장관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향후 국가 수준 및 전국 단위 평가 업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 그 사유를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자료를 제출하기로 한 날 담당자 과장 국장 차관 등의 연락이 두절되고 다음 날 차관은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또 장관 명의로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은 교육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번에 이를 묵인한다면 차후 우리 국회에서의 정활동을 하고 국민을 대변해서 그야말로 민생을 챙기고 여러 가지를 대변하려는 입장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므로 위원장께서는 국회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정봉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예,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정봉주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건대 현 건과 무관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는 기회를 받아서 의사진행발언도 아니고 내용 발언을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2항에 대한 학력 평가 자료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현 건과도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이 진행될 때는 위원장님이 힘드시겠지만 본건과 무관한 발언이고 또 의사진행발언과도 무관할 때는 일정하게 좀 제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숙 위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본건과 무관하다고 했는데 아니지요. 교육과정평가원에 6월 15일 학력진단 평가 결과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 것이 지금 공개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료를 받지 않았고 2002, 2003년도 평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들어옵니다.

○**정봉주 위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안전 상정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이, 이 건과 무관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
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보충
질의 시간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유기홍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를 얘기하시면서 열몇 차례라고
얘기하셨는데, 기록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몇 차례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차관 연락 두절이라는 항목
이 있는데 그것을 발언 과정에서 말씀하셔서 마
치 교육부 차관이나 간부들이 연락을 회피하고,
연락 두절이라는 것은 핸드폰이 어떻게 됐을 수
도 있고 저는 그런 식의 얘기는 속기록에 남기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열몇 차례 얘기
도 그렇고 연락 두절 부분도 그렇고 조금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진수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진수희 위원** 진수희입니다.

평가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은 법적 지위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맞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그렇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러면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
성개발원과 같은 지위에 있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진수희 위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시다만 박사학위 논문을 한국여성개발원의
데이터를 갖고, 원자료를 갖고 돌렸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책연구기관들, 정부출연연구
기관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만든, 조성한 자료에
관해서 2년까지는 릴리스(release)를 안 합니다.
2년이 지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액수를 받
고 판매하기도 하고요.

물론 학술적인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판매하고
그 연구자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술지에 논
문의 형태로 발표하고 논문의 형태로 발표하지만
그것은 결국 공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몇 년 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전국
규모의 굉장히 커다란 서베이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데이터를 모든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에게 프로포절을 다 받아서
심사해서 걸러진 연구자들에게는 또 그 데이터를
릴리스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서
만들어낸 데이터에도 무슨 급이 있습니까? 공개
돼도 되는 데이터가 있고 안 되는 데이터가 있고
법적으로 무슨 급이 있나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법적으로 구분해
놓고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죽 해 온……

○**진수희 위원** 그러면 한국노동연구원이나 한국
여성개발원의 경우 불법 행위를 한 것입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그쪽 얘기는 제
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진수희 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짚었고
요.

그다음에 샘플링 방법이 어떤 특정한 연구 목
적에만 충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
역 간 학력 편차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발표를 하셨는데 여기서 쓰신 층화추출법은 랜덤
샘플링, 무작위추출법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성취도 조사결과는 결국
지역별 성취도 편차를 의미하고, 따라서 지역별
성적 편차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데이터를 돌려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학위논문을 썼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일정
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취도 조사에 있어서 샘플링의 문제는 대표성
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반화시키는 데 그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
이 문제인데요. 그런데 만일 성취도 조사 자체가
랜덤으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사 목적
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것을 불문하고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아야 마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취도 조사가 랜덤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결국은 그 데이터를
분석한 지역 간의 성취도 편차 또한 대표성을 띠
고 신뢰도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
입니다.

평가원에서는 성취도 조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기 때문에 지역 간 편차는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
을 하지만 이 경우는 대표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이 전문적인 분석일
것이고, 따라서 대표성이 없다는 것과 대표성이
약하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이 발언에 관해서 해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오늘이 9월 16일이지요? 정확히 두 달 후에 수능이 치러집니다. 수능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7차 교육과정도 도입되고 나서 첫 수능인데 항상 수능을 치르고 나면 연례행사처럼 수능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교육평가원장님이 옷을 벗습니다. 그것이 연례행사처럼 되어 왔어요.

과연 올해에는 문제가 없겠는지, 제가 알기로 6월 2일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 치르는 것처럼 다른 학교에 가서 치르는 식으로 그대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 결과 별 문제 없었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시행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많은 문제들이 표출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세웠고 오늘 2차 모의고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지금쯤 거의 끝났겠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거의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2차 모의고사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학교 학생들은 해당 학교에서, 이미 졸업한 학생들은 학원에서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께 평준화와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준화 문제에 관해서 아까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60~70%가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이나 보완의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개선이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지역 간의 학력격차도 보완 필요성의 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황우여 예, 답변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는 지

역적인 편차가 있어서 그렇다고 일의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도 보완·개선의 필요는 있고 평준화 정책도 30년 된 것이고 그동안 개선을 위한 노력이 그렇게 집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살펴보면서 개선할 생각입니다.

○진수희 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제도가 낡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마음이 좀 급해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진수희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평준화의 틀 안에서는 한 반에 학력 차이가 많은 학생들이 몇 그룹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려는 것도 이것을 보완하려는, 개선하자는 것이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EBS 수능이라든가 e-러닝을 통해서 지역적인 격차를 줄이려고 저희들이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준화 체제를 그 안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 선지원 후추첨 제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내신성적을 통해서 교육의 중심 축을 수능으로부터 내신으로 옮겨가려는 것도 평준화 체제를 그 안에서 활성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런 것이 개선 노력입니다.

그것을 일의적으로 지역적인 차이로 자꾸만 환원시키려는 집요한 노력에 대해서 제가 좀 좌절합니다.

○진수희 위원 아니, 그런데 취임 초부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위원장 황우여 시간이 워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총리께서는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 위원 지금 열거하신 개선 노력에 관해서 과연 장관께서 액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신지 제가 국감 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 황우여 지금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

준화의 전반적인 문제는 오늘 다루기에는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만 논의하시고……

○조배숙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황우여 예.

○조배숙 위원 지금 평가원장님이 계속 서 계시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부총리님 옆 자리에 앉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아닙니다.

○위원장 황우여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뒷자리에 가서 앉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황우여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고구려사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지금 열리고 있고 제가 만찬연설을 6시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지고 있고 외국 학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꼭 질의하실 분께서 미리 질의를 해 주시고 저를 놓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청원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제가 아까 양 간사께 협의를 좀 구했는데 오늘 고구려사에 대한 국제회의가 열리고 사실 위원장 본인도 가보기는 봐야 되는 처지인데 저야 어쩔 수 없고, 부총리께서 이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정봉주 위원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정봉주 위원께서 이인영 위원님과 순서를 바꾸어서 할까요?

○정봉주 위원 아니, 저는 부총리님에 대해서만 1분 질의하고 이따 평가원장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렇게 하십시오.

○이주호 위원 위원장님, 저는 부총리께 드릴 질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예, 알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자료에 따르면 다섯 과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반수 이상이 10% 안에 드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지요. 과학고와 외국어고가 기존의 목적과 벗어나서 입

시 위주의 학습을 한다는 것은 이미 공지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차제에 과학고와 외국어고가 설립 본연의 목적으로 교육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만약 그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감사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본연의 교육 목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정봉주 위원 두 번째, 이주호 위원이 실질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미 경향신문에서도 모 대학을 지칭하면서 학교등급제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몇몇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상당 부분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학에 대해서 망설이지 말고 강력하게, 원래 교육부 정책에 걸맞은 적합한 선발을 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지금 당장 저희들이 감사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봉주 위원 제 취지는 다 이해를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이인영 위원 가지지요, 저는 나중에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이인영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아까 하던 얘기 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논리적, 내용적으로 평준화, 고교등급제, 연구 설계, 조사 방법과 관련해서 타당하냐의 문제는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제대로 된 행위가 벌어진 것이냐, 법적으로 타당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까 이명희 당시 부연구위원

께서 2001년도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자료를 유출한 것은 불법이라고 확인해 주신 것은 맞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였고, 제가 추가로 요청했던 것은 나머지 3인도 그 자료에 근거해서 연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한 행위가 법적으로 적합한 것이냐, 불법적인 것이냐에 대해서 여쭙 보았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검토하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지금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 추가로 검토해서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그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 당시에 법적인 조치를 명확하게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저질러진 불법의 연장선에서 재탕 불법이 또 저질러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밀 누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사항을 공개했다는 것을 넘어서, 아까 유기홍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적 정보 유출의 문제까지 지금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제11조(개인정보취득자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분명하게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평준화 정책의 기저를 흔드는 문제라든가 고교등급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일로 덮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서 받고 이런 것을 넘어서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따져보시고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법적 조치를 취하셨다면 이런 행위가 일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역 3년 이하 내지는 벌금 1000만 원, 이런 조항입니다. 이것에 대해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KDI 소속 국제정책대학원 산하 교육개혁연구소인지 아니면 임의 연구소인지, 그래서 KDI 국책연구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돌아온 회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정확하게 KDI에 요청해서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세요.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의로, 그리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산하 교육개혁연구소 명의로 죽 보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정정하십시오. 그것이 주는 어떤 권위나 신뢰성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각종 보도 요청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바로잡으셔야 할 일이지 계속 방치할 일이 아니다 이런 측면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용의 적법성 문제로 확 돌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타당한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가의 문제 때문에 불법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덮어놓을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 때문에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법한 행위가 있었으면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감이 시작되기 전까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이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위원**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답변에서 2001년 학업성취도 자료 유출 이외에는 학업성취도 자료 유출이 없었다고 하셨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그렇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이 위증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이 교육위원회 정책연구개발과제 2002-06입니다. 이름이 ‘교육 불평등 완화 방안 탐색 정책 연구’고 중앙대학교 강태중 교수가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년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89페이지에 지역별 학력에 대한 통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시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아직 파악 못 했기 때문에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악하시고 답변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이주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장관이 이석하시는 것을 양해했습니다마는,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교육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일방적으로 저희가 공개한 자료의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학부모라든지 교육 전문가라든지 많은 분들의 격려 반응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이번 자료의 공개를 통해 가지고 저희 교육 정책에 큰 전환이 될 수 있는 희망을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육 격차를 축소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평준화 비평준화의 논의를 떠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 사실 많은 분들이 서울의 굉장히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서울의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시골보다도 오히려 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격차를 축소하자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이……

○**이인영 위원** 위원장님!

○**이주호 위원** 지금 발언 중이니까 좀 나중에 하세요.

○**정봉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이주호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발언 중이지 않습니까?

○**정봉주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이주호 위원** 발언 중에 의사진행발언하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격차를……

○**정봉주 위원** 이주호 위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복기왕 위원** 비례대표로 들어오셔서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유권자 모독 발언입니다.

○**이주호 위원** 제가 발언을 다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위원장 황우여** 발언을……

○**백원우 위원** 비례대표로 안일하게 당선되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진수희 위원** 비례대표는 안일하게 당선됩니까?

○**정봉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주호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계속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동을 거셨는데……

○**정봉주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당사자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이야기하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본인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려는 위원들이 있는데 이런 발언이 어떻게 나오니까?

○**이주호 위원** 제 발언을 다 마친 다음에 발언하세요.

○**정봉주 위원** 그러면 본인을 법적 책임 당사자라고 얘기하고 몰아붙이면 좋아요?

○**위원장 황우여** 가만 있자, 조금 진정하시고……

○**이주호 위원** 아니, 제가 발언을 다 한 다음에 하세요.

○**정봉주 위원** 말씀을 가려서 조심해서 하시라고요.

○**이주호 위원** 너무 격앙되지 마시고 발언을 듣고 하십시오. 지금 제 발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쓰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의 자료 공개가 우리 교육정책의 큰 전환을 요구하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격차를 축소하자는 데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교육 격차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자료 공개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교육 격차를 축소하는 노력을 여야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산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부의 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판단해서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고 이것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공개 안 하는 식의 태도는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부의 정보 공개는 일단 국민의 알 권리를 먼저 충족해야 되느냐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부가 정보 공개를 어떤 순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의 도덕성과 공동 연구자의 명예까지 거론하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개인 의원이 다른 의원을 공격하는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TV 토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정말 다른 생각이 있고 국민들 앞에서 심판을 받아보자는 마음이 드시면 TV 토론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동료 연구자들은 학계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 위원**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의미를 높이 부여하는 것은, 저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마는…… 많은 동료 위원들이 비판하고 그리고 로 데이터가 유출된 불법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자신이 하였던 연구에 대한 자부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그 로 데이터가 가공되어서 나왔던 결과…… 그리고 격려 전화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위원님한테 원망이나 하소연하는 식으로는 한마디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이주호 위원님 분석에 따르면 서울에서 가장 하빠리 지역 의원들입니다. 그런 식의 발언을…… 수십만 명의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오로지 옳다고 하는 독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서울 지역의, 저는 관악구이고 이인영 위원은 구로구이

고 정봉주 위원은 노원구인데 그 지역이 학력 수준이 정말 떨어지는 지역이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 다른 무엇을 떠나서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이주호 위원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가 그 결과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그 논거로서 동료 위원들의 지역구,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의 학력 수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발언을 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학력 저하가 있는 부분을 이번의 자료 공개를 계기로 해서 같이 해소를 해보자는 건설적인 제안을 드린 것이지 결코 비난이나 그런 것을 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봉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주세요.

우리 지역 유권자들에게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던지는데……

○**이주호 위원** 솔직히 모욕은 제가 더 받았어요.

○**백원우 위원** 당신이 받은 것은 개인이지만 유권자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저는 십만 유권자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유기홍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진수희 위원** 백원우 위원님, 비례대표로 안일하게 당선되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백원우 위원** 사과할게요. 내가 비례대표로 뭘 어떻게……

○**진수희 위원** 그것은 전체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모독이에요.

○**위원장 황우여** 조배숙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조배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열린우리당 간사로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련된 문제라서 일부러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적 중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께 지금

여러 열린우리당 위원님께서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께서는 설사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사과를 하시고 이 발언을 취소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원우 위원 이것은 이주호 위원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교육관입니다.

○이주호 위원 제 교육관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봉주 위원 위원장님, 아까 유기홍 위원하고 같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 순서대로 좀 받아 주세요.

○구논회 위원 순서대로 주세요.

○위원장 황우여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가끔 상대 당 위원이나 상대 당에 대한 말씀 중에 선을 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익명으로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비유로 말씀하시든가 해서 가급적 서로의 오해를 피하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자꾸 말씀 나누시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호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끝내십시오.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원우 위원 안 됩니다. 우리끼리의 논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 지역구는 서울대학교 1명 간 학교밖에 없어요.

○위원장 황우여 구논회 위원.

○구논회 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의 성함을 이렇게 거명하는 유감스러운 사태가 있었던 점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한테…… 동료 위원들한테 서로 조심해야 될 것, 발표해서는 안 될 것, 국가 기밀에 관련되는 문제로 국민들한테 지대한 피해가 가고 영향을 미치고 잠 못 자게 하는 이런 일들은 개인적으로 서로 혐의하더라도 앞으로는 조심해서 상임위에서 이름을 거명하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식의 일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

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주호 위원님 말씀 중 여기 계신 서울에 지역구를 두신 모든 위원님들은 학력 격차에서 너무 하위에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는 표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시민과 국민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 사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중재안을 내고 싶습니다.

○이주호 위원 제가 지금 그 발언한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 전에 같은 취지의 의사진행발언을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으면 종합해서 나중에 이주호 위원이 한 말씀 하도록 위원장으로서 권하겠습니다.

아직 정봉주 위원의 보충질의가 4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을 하고 정리하십시오.

○최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우여 다른 취지의 의사진행발언이면 하십시오.

○최재성 위원 이것은 위원들 간의 신뢰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민을 상대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이주호 위원께서 개인적으로 저희들한테 사과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학생이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도 제 아들은 다른 지방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전혀 사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굳이 사과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니깐 이주호 위원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백원우 위원 이 논쟁이 이렇게 끝난다면 아무 소득 없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중에 공주대의 이명희 교수하고…… KDI 국제대학원의 교육개혁연구소의 몇 분 교수님들의 연구서클로 저희들은 확증하고 있는데 확답을 못 주고 계시니까 이 두 분을 국정감사 기간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이주호 위원 발언하시고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제가 발언한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당 위원님들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 발전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당 위원들의 지역구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야당 위원들의 지역구에서도 학력 저하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굳이 여당 위원들만을 지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력 저하가 나타나는 지역이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학력 저하가 밝혀졌기 때문에 개선될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봐 주시고 저의 이번의 자료 공개를 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러면 국정감사 때 이명희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동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명쾌하게 밝힙시다.

이명희 교수하고 다음 교육개혁연구소가 KDI의 부속 연구소인지 아닌지, 공신력 있는 연구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총장님을 모셔다 이야기를 듣도록 하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주호 위원께서 충분히 납득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우여 그것은 지금 논의할 것이 아니니까 간사 간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이인영 위원 사과를 안 하셔도 좋고 그리고 계속 정당성을 주장하셔도 좋고 아니면 또 사과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나중에 다시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본인 말씀하신 취지도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행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이주호 위원께서 취지가 그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들은 것은 전혀 해명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속기록에도 있을 것이니까 더 확인해 보고 그리고 만약 이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잘못 듣고 왜곡해서 이야기 했으면 저희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주호 위원의 해명 말씀 자체가 사실과 굉장히 거리가 먼 또다른 허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것은 속기록을 보고 이야기

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중립적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속 당이 있으니까 힘드시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 3박4일 기간을 같이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의 인품과 인격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이 “발언의 수위와 발언을 자제해 주십시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신과 명예에 관한 문제”라고 분명히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유기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연구결과를 강변하는 것과 누워서 우리 상임위 전체에 침을 뱉는 것과 우리 등 뒤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과 유권자들에게 모욕을 가하는 것과 이것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연동시켜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마시고 혹 우리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위신에 금이 가는 발언이 있게 되면 가차 없이 제지하는 운용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발언하는 하나하나는 역사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아주 좋은 설교이고 좋은 내용인 것 같지만 3년 뒤 4년 뒤에 독이 되어서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실 때 앞뒤를 재시고 그리고 이 발언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감안하시면서 발언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이 연루된 연구결과지만 어느 위원 하나 직접적으로 이주호 위원을 거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혹 발언하다가 흥분이 돼서 동료 위원의 이름이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주호 위원의 가슴에 칼을 찔렀다고 한다면 그 원인과 결과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곱씹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대

한 운용의 묘와 동료 위원들은 발언의 수위를 감안하면서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평가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교육부 관계자들도 많은데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언성 높여서 논쟁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한심하지요? 어떻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2월 23일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법적 대응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때도 여전히 지지부진이었습니다.

법적 대응에 대해서 차제에…… 재발 방지는 각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것을 막기 위해서 일벌백계의 자세로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하십시오.

그리고 교육개혁연구소가 공식적인 단체인지 임의적인 단체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공식 질의를 해서 KDI 국제대학원에서 온 회신에 따르면 대학원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고 공식 연구기관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원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회신을 3일 전에 받았습시다. 이러시면 안 되지요. KDI와 평가원과 교육개혁연구소가 전혀 무관하고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KDI의 공식 발표인 줄 알고 혼돈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연구 결과가 신빙성이 없고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자료 수집한 것을 자의적인 목적으로 꿰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그렇게 발표했다고요. 제목이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입니다.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학력 추이를 검토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연구원께서 이 연구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평가연구본부전문연구원 김경희** 아까는 말씀 안 드렸는데 고1 학생으로 동일하거나 아니면 동일 학교에서 표본이 추출된 경우에도 그 방법론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

니다. 그런데 동일 학생도 아니고 동일 학교도 아닙니다.

지금 2001년도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표본 중에서 동일 학교는 총 5개 학교이고, 그런데 그 5개 학교는 모두 다 대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중소 도시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동일 표본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중차감 방법론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러니까 지역 간 학교 간 학력 격차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자료라는 말이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평가연구본부전문연구원 김경희** 그것은 9월 9일과 10일에 발표된 내용이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2월 23일자 논문입니다.

○**정봉주 위원** 9월 10일 발표에 대해서는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평가연구본부전문연구원 김경희** 저희가 표집을 할 때에 시·도 교육청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표집 설계를 하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전국 수준에서는 충분히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시·도 교육청 단위로 분석을 하기에는 정교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 알겠습니다.

평가원장님, 오늘 답변하시면서 대단히 위험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표집을 3%로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중단 횡단 분석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횡단 분석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정봉주 위원** 3%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3%로 늘리는 것은 확정되어서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10월 20일, 21일 계획을 세워 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 이번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확정된 것입니까, 미리 확정된 것입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전부터 이미 계획이……

○**정봉주 위원** 아,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예.

그리고 중단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로 보

고드렸는데요, 2003년을 기점으로 향후에 중단 분석을 한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과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정봉주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회의가 끝나자마자 속기록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운용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진수희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인 이주호 위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관해서 저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그 발언의 순수한 취지나 의도는 이해하면서도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의도나 취지가 아무리 좋았어도 여기에 서 듣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계신 학생들, 유권자들이 불쾌해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렸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이주호 위원님께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하는 사과를 좀 받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우리가 어차피 한두 해가 아니고 여러 해를 같이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계속 입법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을 감안해서서 그 사과를 받아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자신의 인격이 공격당하는 것을 문제로 생각하신다면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예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저는 못 들었으면 했던 발언을 들었습니다. 흥분하면 조금 발언의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께서 “비례 대표로 안일하게 당선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의 비례 대표 의원들은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로 당선된 것입니다. 안일하게 당선된 것 아닙니다.

이것은 60명 가까이 되는 비례 대표 의원들을—귀 당에도 비례 대표 의원 많습시다—전체적으

로 모독한 것이고, 우리나라에 새로이 도입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발언은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원우 위원 그것은 제가 흥분해서 했던 것이고,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었으니까, 저는 지역구가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서울대학을 1년에 1명 갑니다. 아까 이주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진짜 학력 수준이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선됐는지도 모르겠고요.

비례 대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흥분해서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다, 비례 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과 달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접촉하지 못해서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좀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고요.

이왕 말씀드린 김에 아까 제가 긴급 동의했던 이명희 교수와 국제정책대학원 총장님에 대한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께서 흔쾌하게 동의해 주시리라고 믿고, 국정감사 때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말씀하게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혹시 제 발언이 학력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을 모독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야가 노력을 같이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기왕 위원 취지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건으로 인해서 평준화를 혼드는 것처럼 국민들은 인식하게 됐습니다.

조선일보에 보도 자료가 전해지고, 지난 2월과 이번에 조선일보에 나오면서 평준화가 잘못된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안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께서 말씀한 고교 등급제와 관련한 조사나 감사 계획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온적인데, 조선일보에서 9월 10일자에 “교육 평준화 정책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적인 기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부당하게, 만약에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의 보도 자료와 다른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이었다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조선일보에 법적 대응을 교육부 명의로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언론 대응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최순영 위원님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최순영 위원 장관님께서 안 계셔서 지금 현재 고교등급제 파문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리고 이주호 위원과 진수희 위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을 속기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얘기하고 내용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잘 못하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평가원장님, 아까 정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지요? 이 논문은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판단을 못하십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주호 위원님의 과거의 교육개혁연구소가 KDI의 공식적인 것이었느냐 하는 것 하나하고, 이 논문이 KDI의 논문이나 하는 것이거든요. 앞의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후자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KDI와 전혀 상관없다고 회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에는 KDI에서 연구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아까 KDI 산하 단체 여부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은……

○최재성 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 연구 결과에 대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연구 결과는 KDI의 공식 보고서는 아니고 네 분의 공동 연구 위원이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공식 기구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똑같은 국책 연구기관의 기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최재성 위원 제 얘기는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언론 같은 데도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위원님께서 확인하셨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저희가 드릴게요. 확인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아까 세 가지 얘기하셨는데, 재발 방지 대책이 됩니까? 저희도 그렇지만 국민들에게는 유사한 사례들이 과연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로 재발 방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한 자료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소위 보안성 있는 연구물들은 특수 취급 자료로 별도로 분리해서 보관하는 문제, 저희 원내의 보안 규정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이미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성 위원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장님, 그런 유의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는 사실 각서를 받거나 별도의 분류 작업을 하거나……

그런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정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이것을 사적인 용도로 유출시키거나 절취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열려 있

는 연구진이 유사한 사례를 다시 시도했을 때 근본적인 방지책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자기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논문을 써야 되고 연구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보안 성별로 분류한다거나 각서를 쓴다거나 하는 것은 결국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학자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각서를 쓰면 뭐합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뜻 수긍을 못하는 게, 평가원 입장에서는 한 번의 실수를 일단 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미덥지 않은 그러한 조치로 때우고 계시거든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 가지 문서에 쓴 것 외에 별도의 근본적인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법적 대응을 분명히 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도 포함해서 고민하셔서 이번에 확실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강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자리를 비우신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가 논의한 것이 혹시 국민들이 보시기에 위원들 간의 대립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진심은 17대 내내 논의해야 될 평준화의 문제점, 학력 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는 것이었다는 것으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언성을 높이고 여러 번 강변을 했던 것도 사실은 마음속에 이 나라 교육을 사랑하는 충정과 열망에서 나온 저희 위원들의 최선의 노력이었다고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녹화가 되고 속기록에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하셔서 좀더 생산적이고 귀중한 위원회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국민 앞에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

200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

2004. 9.

교 육 위 원 회

- 목 차 -

- 1. 감사의 목적
 - 2. 감사기간
 - 3. 감사대상기관
 - 4. 감사반의 편성
 - 5. 감사일정 및 장소
 - 6. 주요감사사항
 - 7.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 8. 감사요령
 - 9. 국정감사보고서의 작성
- (붙임1) 국정감사결과건의서 양식

1. 감사의 목적
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및 기타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04년 10월 4일(월)~10월 23일(토) (20일간)

3. 감사대상기관
가. 위원회 선정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 대상기관)

(다음 페이지에 계속)

구 분	대 상 기 관	비 고
제1호 대상기관	(1) 교육인적자원부 (2) 대한민국학술원 (3) 국사편찬위원회 (4) 교원징계재심위원회 (5) 국제교육진흥원 (6) 국립특수교육원	
제2호 대상기관	(1) 서울특별시교육청 (2) 부산광역시교육청 (3) 대구광역시교육청 (4) 인천광역시교육청 (5) 광주광역시교육청 (6) 대전광역시교육청 (7) 울산광역시교육청 (8) 경기도교육청 (9) 강원도교육청 (10) 충청남도교육청 (11) 전라북도교육청 (12) 전라남도교육청 (13) 경상북도교육청 (14) 경상남도교육청 (15) 제주도교육청	
제3호 대상기관	없 음	

나.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 대상기관)

- | | |
|----------------|--------------------|
| (1) 서울대학교 | (2) 부산대학교 |
| (3) 강원대학교 | (4) 전북대학교 |
| (5) 충남대학교 | (6) 전남대학교 |
| (7) 경북대학교 | (8) 경상대학교 |
| (9) 제주대학교 | (10) 서울대학교병원 |
| (11) 경북대학교병원 | (12) 전남대학교병원 |
| (13) 부산대학교병원 | (14) 전북대학교병원 |
| (15) 충남대학교병원 | (16) 경상대학교병원 |
| (17) 강릉대학교치과병원 | (18) 강원대학교병원 |
| (19) 제주대학교병원 |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 (21) 한국교직원공제회 | (2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 (23) 한국사학진흥재단 | (24) 한국학술진흥재단 |
| (2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4. 감사반의 편성

가. 중앙감사반

구 분	교섭단체	감사위원	비 고
감사위원장	한나라당	○ 황 우 여	
위 원	열린우리당	△ 조 배 숙	
"	"	구 논 회	
"	"	백 원 우	
"	"	복 기 왕	

구 분	교섭단체	감사위원	비 고
"	"	유 기 홍	
"	"	이 인 영	
"	"	정 봉 주	
"	"	지 병 문	
"	"	최 재 성	
"	한나라당	△ 이 주 호	
"	"	권 철 현	
"	"	김 영 속	
"	"	박 창 달	
"	"	안 상 수	
"	"	이 군 현	
"	"	진 수 희	
"	비교섭단체	정 몽 준	
"	"	최 순 영	

※ ○은 위원장, △은 간사임.

나. 지방감사반

감 사 반	감사대상	감사반장	감사위원	비 고
감사 1반	강원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강원대학교 충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황우여	구논희 복기왕 유기홍 이인영 김영속 박창달 진수희 최순영	총 9인
감사 2반	전라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조배숙	백원우 정봉주 지병문 최재성 이주호 권철현 안상수 이군현 정몽준	총 10인

5. 감사 일정 및 장소
가.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시 간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감사 1반	감사 2반		
10. 4(월)	10:00	교육인적자원부(직속기관 포함)		현지	
10. 5(화)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지	
10. 6(수)	10:00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현지	
10. 7(목)		감사준비			
10. 8(금)	10:00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회	
10. 9(토)		휴 일			
10.10(일)		휴 일			
10.11(월)	10:00	강원도교육청	10:00	전라북도교육청	현지
	14:00	강원대학교,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14:00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10.12(화)	10:00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10:00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현지
	14:00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14:00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10.13(수)		감사준비			
10.14(목)	10:00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현지
	14:00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병원	14:00	부산대,경상대, 부산대병원,경상대병원	
10.15(금)	10:00	제주도교육청		현지	
	15:00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병원			
10.16(토)		감사준비			
10.17(일)		휴 일			
10.18(월)	10:00	서울대학교		현지	
	15:00	서울대학교병원			
10.19(화)	10:0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회	
10.20(수)		감사준비			
10.21(목)	10:00	교육인적자원부(직속기관 포함)		국회	
10.22(금)		감사정리			
10.23(토)		휴 일			

※감사대상기관(46)

-본부 및 직속기관(6), 시·도교육청(15), 소속단체(6), 국립대학교(9), 국립대학병원(10)

※감사대상제외기관 : 충청북도교육청(전국체전)

나. 중앙감사반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4(월)	10:00	교육인적자원부(직속기관 포함)	현지	
10. 5(화)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지	
10. 6(수)	10:00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현지	
10. 8(금)	10:00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회	
10.15(금)	10:00	제주도교육청	현지	
	15:00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병원		
10.18(월)	10:00	서울대학교	현지	
	15:00	서울대학교병원		
10.19(화)	10:0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회	
10.21(목)	10:00	교육인적자원부(직속기관 포함)	국회	

다. 지방감사 제1반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11(월)	10:00	강원도교육청	현 지	
	14:00	강원대학교,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10.12(화)	10:00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현 지	
	14:00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10.14(목)	10:00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현 지	
	14:00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병원		

라. 지방감사 제2반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11(월)	10:00	전라북도교육청	현 지	
	14:00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10.12(화)	10:00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현 지	
	14:00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10.14(목)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현 지	
	14:00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6. 주요감사사항

- 가. 2004년도 예산의 집행사항
- 나. 2005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 다. 2004년도 주요정책의 추진사항
- 라. 2004년도 주요사업의 추진사항
- 마.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 바. 직속기관 및 소속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항 내지 ‘마’항에 관한 사항 포함)

사.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그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7.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늦어도 감사개시 10일전(2004. 9. 23)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자료를 국정감사 당일 감사위

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 배부토록 함.

가. 2004년도 업무현황

나. 2004년도 예산집행상황

다. 2004년도 각종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라. 200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마. 200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바.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사. ‘가’항 내지 ‘바’항에 관련된 자료

※ 단, 국정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소속 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게 함.

8.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함.

(2) 특히 필요한 때에는 현장검증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

(1)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함.

(2) 각 감사위원은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감사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감사반장)은 이를 종합하여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함.

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되, 관계부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가) 중앙부처는 국장급 이상과 총무과장

(나) 현지 감사대상인 시·도교육청은 과장급 이상

(다) 소속단체 및 관련기관은 집행간부급 이상(다만, 사회사의 장을 포함함)

(2)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인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음.

<참고사항>

(1) 감사대상기관인 산하단체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2004. 10. 21)시 각 기관장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함.

(2) 현지 감사대상인 시·도교육청 감사 시에는 산하교육장을 배석하게 함.

라.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함께 실시함.

(2)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감사반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함.

(4) 위원장(감사반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마. 감사진행순서

(1) 감사개시 선언

(2) 위원장(감사반장) 인사

(3) 증인선서

(4) 2003년도 국정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5) 업무현황보고 청취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현황설명

○ 세부사항 설명

(6) 정책질의 및 부서별 감사(필요시)

(7) 위원장(감사반장)의 감사종료 인사

(8) 감사종료 선언

9. 국정감사보고서의 작성

(1)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감사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사위원 간에 협의를 거쳐 국정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함.

※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각 감사위원들에게 간사회의에서 작성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배부

(3) 소속위원으로부터 보고서에 대한 국정감사결과 의견서(붙임1 참조)를 수합하여 이를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제작성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를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함.

(다음 페이지에 계속)

(붙임1)

국정감사결과 의견서

○ ○ ○ 위원

구 분	시정 및 정부처리요구사항	비 고

○出席委員(18人)

구 논 회	김 영 숙	박 창 달	백 원 우
복 기 왕	안 상 수	유 기 홍	이 군 현
이 인 영	이 주 호	정 몽 준	정 봉 주
조 배 숙	지 병 문	진 수 희	최 순 영
최 재 성	황 우 여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류 충 현
전 문 위 원	천 병 호

○政府側參席者

교육인적자원부

부 총 리 겸	안 병 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차 관 보
차 관 보	정 기 언
기 획 관 리 실 장	구 관 서
학 교 정 책 실 장	윤 응 섭
인적자원개발국장	정 종 수
인적자원관리국장	이 종 갑
감 사 관	김 왕 복

○其他參席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 장	정 강 정
기 획 처 장	김 정 호
교육평가연구본부	김 경 희
전 문 연 구 원	